

“4만원 과태료 빼줘” 지방의원들 ‘갑질 청탁’

광주 서구 공무원들, 의원·지인 요청에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 삭제
국무조정실 감사, 과태료 면제 등 228건 적발…행정 신뢰성 ‘추락’

광주 서구청이 서구의회 의원 등의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삭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은 대상자에 공무원들 지인·가족뿐 아니라 서구의회 의원 상당수도 포함되는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에게는 고정식 주차 단속 카메라로 1분만 어겨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정작 서구의회 의원 등 유력 인사 및 담당

공무원, 지인 등에 대한 특혜성 면제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4일 광주시 서구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달 19일 서구청 환경교통국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국무조정실은 단속 업무 담당 공무원의 주관·임의적 판단에 따른 과태료 면제가 과다하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측은 2018년 1월부터 지난달 18일까

지 고정형·차량이동형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자료 중 직원들이 임의로 삭제한 단속 기록을 확보했다.

국무조정실측은 이 과정에서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들(13명)에 대한 면담 조사를 진행해 일부 직원들에게서 자신 뿐 아니라 가족, 지인 등의 부탁을 받고 단속 기록을 삭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측은 “국무조정실이 확보한 해당 기간 동안의 임의 삭제된 단속 기록은 228건”이라며 “70여 건은 중복단속과 행정 오류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삭제조치된 기록이며, 그 외 150여 건 가량이 임의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서구의회 안팎에서는 국무조정실이 의원들의 차량번호를 확보하고, 100건이 넘는 사례들이 의원들의 청탁 등으로 삭제된 것으로 보고 조사중

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술렁이고 있다.

불법 주정차 관련 절차는 단속→단속 자료 검수→과태료 부과 통보→위반자 의견 진술 제공 및 심의위원회 검토→심의 의결 단속 차량 감면(면제) 처분→과태료 납부 등의 6단계 순서로 진행되지만, 이들은 단속 자료를 2단계인 검수 단계에 앞서 임의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 감사담당관실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감사를 진행중인 만큼 구청이 따로 감사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다”며 “감사결과를 통보받지 않아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무조정실의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경찰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예비 고2~3학년 입시설명회
광주교육청 16일 온라인

광주시교육청이 EBS와 공동 주관으로 16일 오후 7시부터 예비 고 2~3학년 학생 대상 온라인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EBS 대입상담실 진학상담위원이자 EBS 대표 강사인 한양대 사대부고 윤윤구 교사가 2시간 동안 입시정보를 알차게 전달할 예정이다.

2022~2024학년도 입시정보와 수시·정시 기본사항 및 준비사항, 학년별 맞춤형 시기별 입시 준비 방법 등을 학생·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별도의 참여 신청은 받지 않고, 광주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입시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다. 행사 당일 바로 접속 가능한 URL(인터넷주소)을 네이버 빚고을 꿈트리 진로진학상담밴드(band.us/@kwangjuipsi) 공지글에도 공개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



동전 모아 기부해요 14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송년나눔을 위한 ‘사랑의 동전모금함’ 개봉식에서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코리아유치원 어린이들이 우유팩을 이용해 만든 저금통에 1년간 모은 동전들을 한곳에 모으고 있다. 올해로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랑의 동전나눔의 모금액은 복지시설에 지원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일하고 싶은 기업 탐방하고 취업스킬 높이자

동강대, 픽미업 아카데미 등 혁신 지원 사업 개최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학생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을 미리 탐방하고, 취업 스킬(skill)을 높이는 등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취업 프로그램을 잇따라 열었다.

동강대 취업업지원센터(센터장 양운준)는 최근 인사사회관에서 유아교육과 등 11개과 고학년을

대상으로 ‘픽미업(PICK ME UP) 취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프로그램인 이번 아카데미는 학생들의 채용에 대비한 ‘ALL PASS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또 실전 모의 면접 및 피드백 과정을 통해 취업을 앞둔 학생들의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앞서 동강대는 전기과 등 16개과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픽미업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학생들의 취업 목표 설정과 전략적 취업 계획 수립 방법을 안내했고 특히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의 분야에서 NCS 직무역량을 높여 융합형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도했다.

더불어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취업진로탐색 프로그램 ‘꿈의 기업 투어 경진대회’도 열었다. 작업치료과 등 10개과에서 참여했고 ‘코로나 19’로 기업 탐방이 어려워 온라인 활동으로 진행됐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동구 ‘사회적경제 전국 우수지자체’ 선정

광주시 동구가 ‘사회적경제 전국 우수지자체’ 선정됐다.

14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추진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및 우수시책을 공모했으며, 사·도별 자체 심사를 통해 2곳을 추천했다. 최종 전국 25곳 자치구를 심사한 결과 3개 자치구(광주시 동구·경기도 부천·충남 청양)가 우수지자체로 뽑혔다.

동구는 ▲대한주택공사(LH) 협약을 통한 무상 공간 제공 ▲‘충정22’ 사회적기업 위탁 운영 ▲동구청 및 푸른마을공동체센터 내 카페 임대 ▲창업지원센터에 사회적경제기업 3개소 입점 ▲방치된 사유공간을 사회적기업과 협업체 지역혁신 사업 연계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공간제공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의미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들이 성장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북구, 특례보증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안정 효과 ‘톡톡’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4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올해 2억 5000만 원을 출연해 246개 업체에 총 43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

북구는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광주은행,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함께 1년 동안 대출이자와 보증료 전액, 2년차에는 이자의 2%를

지원하는 3무(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출연, 215개 업체에 37억 5000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4무(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출연해 31개 업체에 6억원을 지원했다.

지난달 실시된 특례보증 사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1%가 대출금을 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답변했고, 코로나로 직격탄을 입은 외식업체들에서 특례보증 지원이 매출개선과 경영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해직교원 지위회복 특별법 발의

전남도의회가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의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거나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현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의 교원들의 원상 회복을 위해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이들의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9년 5월 3만여 명의 교원이 참교육을 기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한 뒤 군부독재정권은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결성을 불법화하며 교육민주화 요구를 짓밟고 거세게 탄압, 전교조 107명의 교원이 구속됐으며 1527명이 정당한 절차 없이 강제 해직됐다. 하지만 이후 복직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1990년 10월7일 이전 국공립대학교에 재학 중 시국사건으로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1999년과 2001년 특별채용된 교원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17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의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선국 의원은 “이제라도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교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더불어민주당에 뜻을 함께하는
대한민국 재선에 나설 3020
한국서부발전이 지역 맞춤형의 대규모
해상풍력과 수상 태양광 사업을 통해
청정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